# 정부 수질 및 수생태계 예산은 하수도 관리 비중이 절대적

## 물환경 예산 중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예산은 조사 및 연구 사업뿐 정책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생태 복원에 대한 예산 증대 필요

작성 : 김수나 책임연구원

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| 서울 마포구 동교로 201 | http://www.narasallim.net | 02-336-0619

## 나라살림연구소, 세계 물의 날(3/22)을 맞아 정부 물관리 총지출 분석

### - 요 약 -

❖ 3월 22일은 심각해지는 물 부족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UN이 1992년 제47차 총회에서 선포한 '세계 물의 날'로 우리 나라는 「물관리기본법」에서 물관리와 관련한 국가의 책무 및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음.

❖ 정부 총지출 중 물관리와 관련된 지출은 ◇ 환경 분야의 △ 물환경 부문 및 ◇ 국토및지역개발 분야의 △ 수자원 부문이 있으며 정부 총지출 대비 물관리 관련 정부 지출 규모의 비율은 약 1% 내외임.

❖ 물관리와 관련된 업무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각각 수자원과 물환경 관련된 영역을 담당하였지만, 「정부조직법」이 2018년과 2020년 개정되며 물관리 일원화가 이루어지며 국토부의 수자원 및 하천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되었음. 단, 기후대응기금이 2022년 신설되며 물환경 부문에서 탄소중립구축 관련된 R&D 사업은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편성됨.

❖ 물관리 관련 정부 총지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프로그램은 수질 및 수생태계이며 하위 단위사업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하수도 관리로 2020년 30.3%, 2021년 28.0%, 2022년 29.9%, 2023년 36.1%임. 2022년 종전의 물오염원 관리 프로그램에서 수질 및 수생태계관리로 프로그램 명이 변경되었음에도 하위 단위사업은 여전히 관성적으로 수질과 관련된 사업만 편성하고 있음.

❖ 세부사업명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생태계 관련한 사업은 △ 수질 및 수생태계 측정조사, △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기술개발사업 (R&D), △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진단체계 구축 사업 등 3개의 사업에 불과함.

❖ 수질 오염 저감과 관련하여 환경부는 지자체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지원의 근거로 전국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의 약 70%가 ('18년, BOD T-P 기준) 도로, 농경지, 축사 등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에 의한 배출부하량으로 밝히고 지원을 통해 비점오염원의 효율적 관리 및 수질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음. 하수 관리를 통한 수질 개선은 하수도 건설 및 관리 이상으로 비점오염원 관리가 중요함을 역설하는 것으로 비점오염원 관리 예산이 증대될 필요성이 있음.

❖ 2022년 12월 쿤밍-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채택[1]으로 말미암아 하천 부문의 서식지 보호과 복원 사업도 확대될 필요가 있음.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[2]에도 하천의 연속성 확보가 주요하게 제시된 만큼 현재 수준의 예산 편성은 다소 소극적으로 판단됨.

❖ 따라서「물관리기본법」에서 명시한 국가의 책무와 물관리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물관리 정책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조물 건설 및 관리에 대한 예산보다 생태 복원에 대한 예산이 증대될 필요성이 있음.

❖ 또한 물관리 관련한 세부 부문이 수자원과 물환경으로 나누어져 수자원 부문의 △ 용수공급 및 개발로 상수도 사업을 관장하는 것과, 물환경 부문의 △ 맑은물 공급 및 이용으로 상수도 관리 사업이 중복의 우려가 있어 향후 조정이 필요해 보임.

➢ 일러두기
  - 우리나라 공식 예산 분류 체체계에 물 관리와 관련한 부문명은 △ 수자원 및 △ 물환경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두 부문을 통칭하여 "물관리"라고 표현함.
  - 한계 : 본 보고서는 열린재정에서 제공하는 연도별 예산편성 자료를 정부 공식 예산 분류 체계의 분야, 부문, 프로그램, 단위사업, 세부사업명으로 분석한 것으로 실제 사업 내용과 분류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.

## 1. 분석 이유

- 3월 22일은 심각해지는 물 부족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UN이 1992년 제47차 총회에서 선포한 '세계 물의 날'임.

- 우리 나라는「물관리기본법」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항에 국가의 책무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음.

> 「물관리기본법」 제**5**조 **(**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**)**
> ① 국가는 물관리의 기본이념에 따라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,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가 있다.

- 동법 제2장 물관리의 기본원칙 제8조에서는 물의 공공성을, 제9조에서는 건전한 물순환을, 제10조에서는 수생태환경의 보전을 물관리의 기본원칙으로 명시하고 있음.

> 「물관리기본법」 제**8**조 **(**물의 공공성**)**
> 물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국가의 물관리 정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며 물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이용되어야 한다.

> 「물관리기본법」 제**9**조 **(**건전한 물순환**)**
>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이 순환과정에서 지구상의 생명을 유지하고, 국민생활 및 산업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생태계의 유지와 인간의 활동을 위한 물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> 「물관리기본법」 제**10**조 **(**수생태환경의 보전**)**
>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는 경우 생물 서식공간으로서의 물의 기능과 가치를 고려하여 수생태계 건강성이 훼손되는 때에는 이를 개선·복원하는 등 지속가능한 수생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[1] Kunming-Montreal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, 18 Dec. 2022, CBD/COP/15/L.25 [PDF-374 Kb]
[2] 관계부처합동,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(2021~2030), 2021

-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정부의 물과 관련된 예산을 분석하여 「물관리기본법」에서 명시한 국가의 책무와 물관리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물 관리 정책과의 정합성을 분석하고자 함.

## 2-1. 정부 총지출 중 물관리 관련 지출 규모

- 정부 총지출 중 물관리와 관련된 지출은 ◇ 환경 분야의 △ 물환경 부문 및 ◇ 국토및지역개발 분야의 △ 수자원 부문이 있음.

- 정부 총지출 중 환경 분야 규모는 2020년 대비 2023년 연평균 10.8%의 비율로 증가하였지만, 물관리 관련 총지출은 연평균 3.5% 비율로 증가하여 정부 총지출 규모 증가보다 완만한 비율로 증가하였음.

- 물환경 부문은 연평균 2.5% 비율로 증가, 수자원 부문은 연평균 6.7% 비율로 증가하여 금액적 규모는 물환경 부문이 더 많지만, 증가 추세는 수자원 부문이 더 가파름을 확인할 수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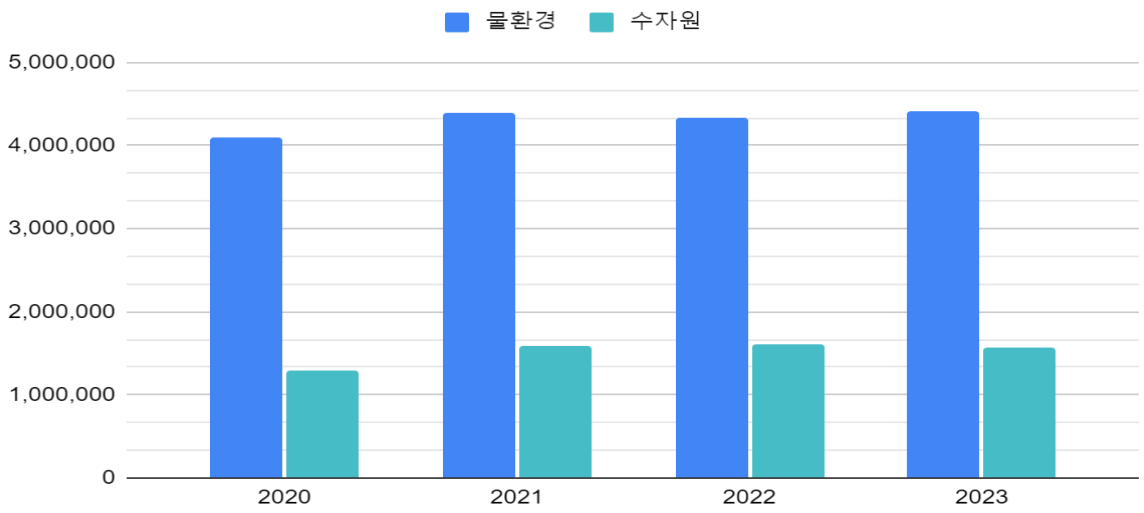
**[표 1]** 정부 총지출 및 환경 분야 내 물환경 부문 예산 편성 현황

(단위 : 백만원, %

| 물관리 관련 정부 지출 | **2020** 확정 총지출 | 비중 | **2021** 확정 총지출 | 비중 |
|---|---|---|---|---|
| 정부 총지출 **(A)** | 512,250,448 | | 557,987,188 | |
| 환경 | **9,012,909** | 100% | **10,615,665** | 100% |
| 물환경 (B) | 4,091,283 | 45% | 4,401,529 | 41% |
| 국토및지역개발 | **4,046,657** | 100% | **5,084,712** | 100% |
| 수자원 (C) | 1,290,906 | 32% | 1,591,452 | 31% |
| 물관리 관련 정부 지출 규모 **(D=B+C)** | **5,382,189** | | **5,992,981** | |
| 정부 총지출 대비 물관리 관련 총지출 비율 .(E=D/A) | | 1.10% | | 1.10% |
| 물관리 관련 정부 지출 | **2022** 확정 총지출 | 비중 | **2023** 확정 총지출 | 비중 |
| 정부 총지출 **(A)** | 607,663,263 | | 638,727,655 | |
| 환경 | **11,936,460** | 100% | **12,248,745** | 100% |
| 물환경 (B) | 4,338,768 | 36% | 4,404,806 | 36% |
| 국토및지역개발 | **5,119,262** | 100% | **4,167,380** | 100% |
| 수자원 (C) | **1,605,480** | 31% | **1,568,194** | 38% |
| 물관리 관련 정부 지출 규모 **(D=B+C)** | **5,944,248** | | **5,973,000** | |
| 정부 총지출 대비 물관리 관련 총지출 비율 .(E=D/A) | | 1.00% | | 0.90% |

(출처 : 열린재정, 나라살림연구소 재가공)

**[그림 1]** 물관리 관련 정부 총지출




## 2-2. 물관리관련 소관부처 별 총지출 편성 현황

- 정부는 물관리관련 사업으로 △ 수자원-하천관리, △ 수자원-댐건설 및 댐관리 능력, △ 수자원-수자원정책, △ 수자원-용수공급 및 개발, △ 수자원-하천관리, △ 물환경-4대강유역관리, △ 수자원-맑은물 공급 및 이용, △ 물환경-물오염원관리, △ 물환경-수생태계관리, △ 물환경-토양 지하수 관리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.

- 물관리관련 사업 중 단일 프로그램으로 가장 큰 규모가 편성된 사업은 연도별로 △ 2020년 물오염원 관리가 38%, △ 2021년 물오염원 관리 35.9%, △ 2022년 수질 및 수생태계관리 39%, △ 2023년 수질 및 수생태계 관리 44.7%임.

- 프로그램 명은 변경되었지만 2020, 2021년 물 오염원 관리의 단위사업은 산업폐수 및 수질개선, 하수도 관리 관련된 사업이 편성되었으며, 2022, 2023년 수질 및 수생태계 관리 사업의 단위사업도 동일하게 산업폐수, 기타오염원, 수질개선, 하수도 관리 사업이 편성되어 실질적으로는 정부 물관리 관련 총지출 중 가장 많은 재원이 편성되어 관리하는 것은 수질과 하수도 관련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음.

- 또한 「정부조직법」이 2018년과 2020년 개정되며 물관리 일원화가 이루어진 여파로 국토부의 수자원 및 하천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. 2023년 하천관리 업무가 환경부 소관으로 편성되며 물관리 관련된 사업은 환경부가 대다수 담당하나, 기후대응기금 편성으로 인해 탄소중립구축 관련된 R&D 사업이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2022년부터 편성되고있음.

**[표 2]** 수자원 및 물환경 부문 소관 부처 및 세부 내역

(단위 : 백만원, %)

| 연도 | 소관부처-분야-부문-프로그램 | 총지출 규모 | 물관리 총지출 대비 비중 | 프로그램 별 단위사업 주제 |
|---|---|---|---|---|
| 2020 | 정부 물관리 종치출 | **5,382,189** | 100% | |
| | 국토교통부 | | | |
| | 국토및지역개발 | 2,639,075 | | |
| | 수자원 | 553,098 | 10.28% | |
| | 하천관리 | 553,098 | 10.28% | 국가하천정비지원, 지방하천정비지원, 하천편입토지보상 |
| | 환경부 | | | |
| | 국토및지역개발 | 737,808 | | |
| | 수자원 | 737,808 | 13.71% | |
| | 댐건설 및 댐 치수능력 증대 | 149,706 | 2.78% | 댐건설, 댐운영지원, 치수능력증대사업 |
| | 수자원정책 | 64,992 | 1.21% | 수자원계획 및 조사 |
| | 용수공급및개발 | 121,109 | 2.25% | 공업용수도건설, 광역상수도건설, 지방광역상수도 |
| | 하천관리 및 홍수예보 | 402,001 | 7.47% | 국가하천정비지원, 수문조사 및 홍수예보 지원 |
| | 환경 | 8,740,705 | | |
| | 물환경 | 4,091,283 | 76.02% | |
| | 4대강유역관리 | 928,879 | 17.26% | 수질개선, 오염총량관리, 주민지원, 친환경청정사업,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, 환경기초시설 |
| | 맑은물 공급·이용 | 1,064,736 | 19.78% | 물재이용, 상수도 관리, |
| | 물오염원 관리 | 2,046,266 | 38.02% | 산업폐수, 기타오염원, 수질개선기반구축, 하수도관리 |
| | 수생태계 관리 | 51,402 | 0.96% | 토양지하수관리, 하천 생태보전 |
| 2021 | 정부 물관리 종치출 | **5,992,981** | 100% | |
| | 국토교통부 | | | |
| | 국토및지역개발 | 3,575,150 | | |
| | 수자원 | 812,552 | 13.56% | |
| | 하천관리 | 812,552 | 13.56% | 국가하천정비지원, 하천편입토지보상 |
| | 환경부 | | | |
| | 국토및지역개발 | 778,900 | 13.00% | |
| | 수자원 | 778,900 | 13.00% | |
| | 댐건설 및 댐치수능력 증대 | 164,006 | 2.74% | 댐건설, 댐운영지원, 치수능력증대사업 |
| | 맑은물 공급·이용(광역) | 118,756 | 1.98% | 공업용수도관리, 광역상수도 관리, 지방광역상수도 |
| | 수자원정책 및 홍수관리 | 496,138 | 8.28% | 수문조사 및 시설운영, 수자원정책 및 조사 |
| | 환경 | 10,332,271 | | |
| | 물환경 | 4,401,529 | 73.44% | |
| | 4대강유역관리 | 964,890 | 16.10% | 수질개선, 오염총량관리, 주민지원, 친환경청정사업,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, 환경기초시설 |

|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
| | 맑은물 공급·이용 | 1,219,138 | 20.34% | 물재이용, 지방상수도 |
| | 물오염원 관리 | 2,154,506 | 35.95% | 산업폐수, 수질개선, 하수도관리 |
| | 토양지하수관리 | 62,995 | 1.05% | 토양지하수관리 |
| 2022 | 정부 물관리 종치출 | **5,944,248** | 100% | |
| | 국토교통부 | | | |
| | 국토및지역개발 | 3,349,799 | | |
| | 수자원 | 714,918 | 12.03% | |
| | 하천관리 | 714,918 | 12.03% | 국가하천정비지원, 하천편입토지보상 |
| | 환경부 | | | |
| | 국토및지역개발 | 890,562 | 14.98% | |
| | 수자원 | 890,562 | 14.98% | |
| | 댐 운영 및 관리 | 191,185 | 3.22% | 댐운영 및 안전관리, 지역맞춤형 댐건설 |
| | 맑은물 공급·이용(광역) | 132,169 | 2.22% | 공업용수도 관리, 광역상수도관리 |
| | 수자원정책 및 홍수관리 | 546,107 | 9.19% | 수문조사 및 시설운영, 수자원 국제협력, 수자원 정책 및 조사, 수자원 연구개발, 수자원정책 및 조사 |
| | 환경행정 지원 | 21,101 | 0.35% | 홍수통제소 기본경비 등 |
| | 환경 | 10,962,353 | | |
| | 물환경 | 4,336,843 | 72.96% | |
| | 4대강유역관리 | 972,361 | 16.36% | 수질개선, 오염총량관리, 주민지원, 친환경청정사업,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, 환경기초시설 |
| | 맑은물 공급·이용 | 1,005,192 | 16.91% | 물산업 및 물기술 진흥, 지방상수도관리 |
| | 수질 및 수생태계 관리 | 2,316,018 | 38.96% | 산업폐수, 기타오염원, 수질개선, 하수도 관리 |
| | 토양지하수관리 | 43,272 | 0.73% | 토양지하수관리 |
| | 기획재정부 | | | |
| | 환경 | 643,681 | | |
| | 물환경 | 1,925 | 0.03% | |
| | 탄소중립기반구축 | 1,925 | 0.03% | 기술개발 |
| 2023 | 정부 물관리 종치출 | **5,973,000** | 100% | |
| | 환경부 | | | |
| | 국토및지역개발 | 1,568,194 | 26.25% | |
| | 수자원 | 1,568,194 | 26.25% | |
| | 댐 운영 및 관리 | 203,327 | 3.40% | 댐운영 및 안전관리, 지역맞춤형 댐건설 |
| | 맑은물 공급·이용(광역) | 106,626 | 1.79% | 공업용수도 관리, 광역상수도 관리 |
| | 수자원정책 및 홍수관리 | 484,481 | 8.11% | 수문조사 및 시설운영, 수자원 국제협력, 수자원 정책 및 조사, 수자원 연구개발, 수자원 정책 및 조사 |

|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
| | 하천관리 | 750,324 | 12.56% | 국가하천 정비지원, 지방하천 정비지원, 하천편입 토지보상 |
| | 환경행정 지원 | 23,436 | 0.39% | 홍수통제소 기본경비 외 |
| | 환경 | 11,079,972 | | |
| | 물환경 | 4,402,882 | 73.71% | |
| | 4대강유역관리 | 1,005,137 | 16.83% | 수질개선, 오염총량관리, 주민지원, 친환경청정사업,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, 환경기초시설 |
| | 맑은물 공급·이용 | 686,880 | 11.50% | 물산업 및 물기술 진흥, 지방상수도관리 |
| | 수질 및 수생태계 관리 | 2,667,201 | 44.65% | 산업폐수, 기타오염원, 수질개선, 하수도 관리 |
| | 토양지하수관리 | 43,664 | 0.73% | 토양지하수관리 |
| | 기획재정부 | | | |
| | 환경 | 827,911 | | |
| | 물환경 | 1,924 | 0.03% | |
| | 탄소중립기반구축 | 1,924 | 0.03% | 기술개발 |

(출처 : 열린재정, 나라살림연구소 재가공)

## 2-3. 수질 및 수생태계 관리 사업 내용

- 물관리 관련 정부 총지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프로그램은 수질 및 수생태계임. 수질수생태계 하위 단위사업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하수도 관리로 2020년 30.3%, 2021년 28.0%, 2022년 29.9%, 2023년 36.1%임.

- 2020, 2021년에는 물 오염원 관리 프로그램이었지만, 2022, 2023년 수질 및 수생태계 관리로 프로그램 명이 변경되었음에도 하위 단위사업은 여전히 관성적으로 수질과 관련된 사업만 편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.

**[표 3]** 수질 관련 단위사업

(단위 : 백만원, %)

| 연도 | 수질 관련 부문 - 프로그램-단위사업 | 총지출 | 비중 | 연도 | 수질 관련 부문 - 프로그램-단위사업 | 총지출 | 비중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2020 | 정부 물관리 종치출 | **5,382,189** | 100 | 2021 | 정부 물관리 종치출 | **5,992,981** | 100 |
| | 물오염원 관리 | **2,046,266** | 38.0% | | 물오염원 관리 | **2,154,506** | 36.0% |
| | 산업폐수 및 기타오염원 관리 | 254,743 | 4.7% | | 산업폐수 및 기타오염원 관리 | 275,461 | 4.6% |
| | 수질개선기반구축 | 160,967 | 3.0% | | 수질개선기반구축 | 202,642 | 3.4% |
| | 하수도 관리 | 1,558,943 | 29.0% | | 하수도 관리 | 1,629,417 | 27.2% |
| | 하수도 관리(농특) | 50,796 | 0.9% | | 하수도 관리(농특) | 39,588 | 0.7% |
| | 하수도 관리(세종) | 11,244 | 0.2% | | 하수도 관리(세종) | 7,398 | 0.1% |
| | 하수도 관리(제주) | 9,573 | 0.2% | | 하수도 관리(제주) | 0 | 0.0% |
| 2022 | 정부 물관리 종치출 | **5,944,248** | 100 | 2023 | 정부 물관리 종치출 | **5,973,000** | 100 |
| | 수질 및 수생태계 관리 | **2,316,018** | 39.0% | | 수질 및 수생태계 관리 | **2,667,201** | 44.7% |

| | | |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산업폐수 및 기타오염원 관리 | 283,564 | 4.8% | | 산업폐수 및 기타오염원 관리 | 248,175 | 4.2% |
| | 수질개선기반구축 | 256,830 | 4.3% | | 수질개선기반구축 | 262,977 | 4.4% |
| | 하수도 관리 | 1,733,182 | 29.2% | | 하수도 관리 | 2,114,970 | 35.4% |
| | 하수도 관리(농특) | 38,155 | 0.6% | | 하수도 관리(농특) | 36,152 | 0.6% |
| | 하수도 관리(세종) | 3,887 | 0.1% | | 하수도 관리(세종) | 3,887 | 0.1% |
| | 하수도 관리(제주) | 400 | 0.0% | | 하수도 관리(제주) | 1,040 | 0.0% |

(출처 : 열린재정, 나라살림연구소 재가공)

- 열린재정에서 제공하는 정부 예산 사업으로 확인할 수 있는 최소 사업단위인 세부사업 중 수생태계를 명시하고 있는 사업은 다음의 11개의 사업만 편성되어있음.

- △ 수질 및 수생태계 측정조사, △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기술개발사업 (R&D)는 매년 연례적으로 편성되고 있으며, 2021년 부터는 △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진단체계 구축 사업이 연례적으로 편성되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물관리 예산 중 수생태계 관련된 예산은 진단 및 조사 사업 3개 밖에 없음을 확인 할 수 있음.

**[**표 **4]** 수생태계 관련 세부사업

(단위 : 백만원, %)

| 연도 | 프로그램명 | 세부사업명 | 총지출 |
|---|---|---|---|
| 2020 | 물오염원 관리 |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기술개발사업(R&D) | 5,969 |
| 2020 | 물오염원 관리 | 수질 및 수생태계 측정조사 | 54,282 |
| 2021 | 물오염원 관리 |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기술개발사업(R&D) | 11,642 |
| 2021 | 물오염원 관리 | 수질 및 수생태계 측정조사 | 81,944 |
| 2021 | 물오염원 관리 |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진단체계 구축 | 11,500 |
| 2022 | 수질 및 수생태계 관리 |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기술개발사업(R&D) | 14,496 |
| 2022 | 수질 및 수생태계 관리 | 수질 및 수생태계 측정조사 | 81,357 |
| 2022 | 수질 및 수생태계 관리 |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진단체계 구축 | 7,500 |
| 2023 | 수질 및 수생태계 관리 |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기술개발사업(R&D) | 17,778 |
| 2023 | 수질 및 수생태계 관리 | 수질 및 수생태계 측정조사 | 68,721 |
| 2023 | 수질 및 수생태계 관리 |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진단체계 구축 | 6,000 |

(출처 : 열린재정, 나라살림연구소 재가공)

## **3.** 나라살림연구소 의견

- 「물관리기본법」 제2장에서는 물관리 기본원칙으로 △ 물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이용 (제8조 물의 공공성), △ 생태계의 유지와 인간의 활동을 위한 물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 (제9조 건전한 물순환), △ 생물 서식공간으로서의 물의 기능과 가치를 고려하여 수생태계 건강성이 훼손될 시 개선 및 복원하는 등 지속가능한 수생태환경의 보전을 위해 노력 (제10조 수생태환경의 보전) 등 생태계의 유지가 인간의 활동에 대한 내용보다 강조되고 있음.

- 정부의 물관리 관련 총지출 사업 분석 결과 정부는 여전히 담수를 자원으로만 간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천 생태보전보다 △ 상하수도건설 및 관리, △ 하천정비지원 등에 더 집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.

- 수질 오염 저감과 관련하여 환경부는 지자체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지원의 근거로 전국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의 약 70%가 ('18년, BOD T-P 기준) 도로, 농경지, 축사 등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에 의한 배출부하량으로 밝히고 지원을 통해 비점오염원의 효율적 관리 및 수질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음. 하수 관리를 통한 수질 개선은 하수도 건설 및 관리 이상으로 비점오염원 관리가 중요함을 역설하는 것으로 비점오염원 관리 예산이 증대될 필요성이 있음.

- 2022년 12월 쿤밍-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채택[3]으로 말미암아 하천 부문의 서식지 보호과 복원 사업도 확대될 필요가 있음. 특히 2006년 환경부의 공릉천 보 철거 시범사업을 통해 추진[4]한 바와 같이 하천의 횡단 구조구조물(예: 보, small dam, weir 등)을 철거하면 적은 예산으로도 생태 복원 및 수질 개선 효과가 큰 것이 연구 결과로도 입증되었음.[5]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[6]에도 하천의 연속성 확보가 주요하게 제시된 만큼 현재 수준의 예산 편성은 다소 소극적으로 판단됨.

- 따라서 「물관리기본법」에서 명시한 국가의 책무와 물관리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물관리 정책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조물 건설 및 관리에 대한 예산보다 생태 복원에 대한 예산이 증대될 필요성이 있음.

- 또한 물관리 관련한 세부 부문이 수자원과 물환경으로 나누어져 수자원 부문의 △ 용수공급 및 개발로 상수도 사업을 관장하는 것과, 물환경 부문의 △ 맑은물 공급 및 이용으로 상수도 관리 사업이 중복의 우려가 있어 향후 조정이 필요해 보임.

참고자료


- "보 철거하면 하천생태 복원", 대한전문건설신문, 2006. 09. 25
- 우효섭, 2008, 기능을 상실한 보 철거를 통한 하천생태통로 복원 및 수질개선효과, 환경부
- "주민이 함께 가꾼 성남시 탄천, 최우수 생태하천에 선정", 환경부 보도자료, 2017. 11. 13
- 관계부처 합동, 제1차 국가물관리 기본계획 (2021-2030)
- 쿤밍-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
- 환경부 2020년도 사업설명자료
- 열린재정,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 (총지출), 2020-2023, 연도별



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
문의 : 김수나 (O1O - 9910 - 8612)
E-mail : soasilvia@gmail.com



'나라살림브리핑'은 나라살림연구소에서 관련 전문가 및 경제부 기자에게 발송하는 재정관련 브리핑입니다. 재정, 조세, 예산 관련 정부, 국회, 학계 및 시민사회의 동향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전달하는 한편 나라살림연구소의 비판과 대안이 담겨 있습니다. 이 브리핑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나라살림레터 구독신청을 해주십시오. 구독 신청하기 클릭!


[3] Kunming-Montreal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, 18 Dec. 2022, CBD/COP/15/L.25 [PDF-374 Kb]
[4] "보 철거하면 하천생태 복원", 대한전문건설신문, 2006. 09. 25.
[5] "주민이 함께 가꾼 성남시 탄천, 최우수 생태하천에 선정", 환경부 보도자료, 2017. 11. 13.
[6] 관계부처합동,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(2021~2030), 2021